

제434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4월3일(금)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7938)

가. 교육부 소관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7938) 1

가. 교육부 소관

(10시02분 개의)

○소위원장 조정훈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7938)

가. 교육부 소관

(10시03분)

○소위원장 조정훈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교육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지난 1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이 있었고요. 또 이후 서면질의를 내주신 위원님들이 계셔서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를 반영하여서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자료를 중심으로 한 건 한 건씩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순서에 따라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입장을 듣고 위원님들이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기도 하고 또 한편 시간이 금이다라는 격언도 생각이 나서, 하여튼 효율적으로 최대한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위 자료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은 증액 요구사업이 9건, 부대의견 요구사항이

11건입니다. 참고로 이번 교육부 소관 추정안 자체는 교부금을 제외했을 때 4개 사업 총 416억 원 규모입니다.

그러면 증액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항은 국립대학 기본경비 관련 사항으로 기본경비가 지금 연례적으로 공공요금 부분에서 부족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26년 편성 예산의 10%인 86억 7300만 원 정도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서 저희 공공요금 지출 압박이 있기 때문에 증액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86억 전액 동의하시는 겁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소위원장 조정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86억을 지금 국립대학으로 나누면 한 대학에 어느 정도 돼요? 그거를 학생 수로 나눴니까, 아니면 학교 단위로 나눴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작년에 공공요금 전체가 867억이었는데요. 이거의 10%이기 때문에 이 요금에 비례해서 각 대학에 10%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비례해서 그 대학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이러면 1억을 해 주고 20억이다 하면 2억을 해 주고 이렇다는 거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소위원장 조정훈 동의하십니까, 김 위원님?

○김대식 위원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없으시면, 다들 이의 없으신 걸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제교육기획관 관련 회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다음은 4페이지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해외 한국어 보급 사업으로 신규 요청사항입니다. 해외 현지 학교의 한국어 반에 보조교사를 파견하는 내용인데 청년들을 선발하는 내용이고 지원대상은 34세 이하 청년 300명 정도입니다. 지원내용을 보시면 청년 1인당 250만 원 또는 200만 원을 월 6개월간 지원하는 내용이고 70억 원 증액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지원대상으로 진선미 위원님께서 34세 이하 취약계층 청년을 선발하자는 의견을 주셔서 사업대상에 대한 확정이 같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청년들의 해외 한국어 교육 분야 관련해서 경험과 경력 개발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요. 위원님께서 취약계층 중심으로 하자는 데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 위원님.

○**김용태 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에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겠고 그동안 재정사업 자율평가가 좋았더라는 것도 좋은 평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이게 본예산 대비 추경예산이 한 30%가 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전경추경의 목적하고 맞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의 문화체육관광부의 세종학당의 국외 파견이라든지 재외 동포청의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너무 많이 늘리는 것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말씀드릴까요?

○**소위원장 조정훈** 예, 정부 측 입장.

잠깐만요, 차관님.

김용태 위원님, 그러면 취지는 동의하는데 감액을 요청하시는 거지요?

○**김용태 위원** 예.

○**소위원장 조정훈** 어느 정도, 제안하신 금액이 있으십니까?

○**김용태 위원** 아닙니다. 정부 측 의견을 좀 듣고 판단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예, 알겠습니다.

차관님.

○**교육부차관 최은옥** 문체부에서 하는 세종학당하교의 업무 소관은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하고 있어서 문제가 없고요.

이 사업이 한국어 교사가 많이 필요한데 그동안 저희가 제공을 많이 못 해 주고 있고 또 청년들의 이 경험에 필요하다는 것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올해부터 해외에 한국어 보급을 더 해야 되는 그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에듀 관련해서. 그래서 이게 다소 기존 예산에 비해서는 조금 비율이 높더라도 이만큼은 저희가 청년들을 다 선발해서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김용태 위원** 그러니까 의미는 동의를 하는데 이게 긴급·긴급하게 써야 되는, 물론 빚 없이 내서 하는 추경이라고 하지만 국가재정법에 어쨌든 이 남는 돈은 최대한 우리가 국채를 상환하는 데 쓰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근데 이게 추경 목적 대비 너무 과하게 잡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본예산 대비 저희가 30%를 증액해 가지고 추경에서 70억이라고 하는……

○**교육부차관 최은옥**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요.

○**김용태 위원**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조정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를 텐데 이 청년들이 지금 취업하지 않고 있는 청년들이고 이번 추경이 유가 급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라든지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큰 테마로 잡혀 있기 때문에, 취업하지 않은 저소득층 청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많이 지원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선미 위원** 저도 말을 좀 보태 볼까요?

○**소위원장 조정훈** 진선미 위원님.

○**진선미 위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번 추경의 취지에 이게 부합하나 이런 고민을 안 한 건 아닙니다. 다만 말씀해 주신 대로 취약계층을 살핀다는 편성 취지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저희는 봤고 그리고 이게 여기서만 딱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시 예결위에 올라가서 이것들을 또 전면적으로 전체적인 검토를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취지대

로 올라가서 예결위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면 그 취지 예결위…… 김용태 위원님 동의해 주시면 움직이는데 내용에 보니까 사업관리비가 16억이나 됩니다. 70억 예산에 사업관리비 16억이면 제가 산수를 해도 이게 20%가 넘는 사업관리비인데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이것? 한 2~3%, 5% 안의 사업관리비인데 이것 맞지요? 20% 넘는 거지요, $2 \times 7 = 14$?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왜 이렇게 많이 듭니까, 사업관리비가?

○교육부차관 최은옥 이 사업은 단순히 청년을 선발해서 보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6개월 동안 해외에 가 있는데 거기서 안전하게 체재를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되는 내용이 있고 또 저희가 파견하는 파견국 대학과의 학술교류 이런 것도 포함해서 관리비가 다른 사업보다 많이 잡힌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청년……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김용태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지난 26년도 본예산에 잡힌 해외 한국어 보급 사업도 사업비가 20% 정도였습니까?

○김대식 위원 아니지.

○소위원장 조정훈 저는 차라리 거기다가 그냥 학생을 추가하면 훨씬 이것보다는…… 아, 이것은 신규사업이군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기존에는 취약계층 청년을 선발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한국어 교원 파견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내역으로만 보면 이것은 신규에 해당합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질문 있으세요?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위원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제시했는데 나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것을 우리가 교육적인 측면에서……

차관님, 한국어교육원 여러 군데 한번 가 보셨어요? 한번 가 보셨어요, 해외에?

○교육부차관 최은옥 최근에는 가 보지 못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최근에 못 가 보셨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김대식 위원 한번 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학생이 없어요. 정말 이것 앞으로 심각합니다.

그런데 세종학당은 사실은 문화부에서 할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이기주의 때문에 세종학당은 세종학당대로 그렇지, 외교부는 외교부대로 그렇지, 또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그렇지.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한국어 교육, 한국말 잘한다고 해서 한국어 교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교육부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사업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종학당하고 교육부에서 이것하고 해서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는 가서 보면 학생이 거의 없어. 3명·4명, 오히려 선생님이 더 많은 이런 경향이 있고. 그래서 안 되니까 대사관 직원들 자녀들 보내는데 대사관 직원들 자녀는 또 인터

내셔널 스쿨에 보내고 이렇게 돼 버리니까 거의 지금 폐허 상태나 다름없는 이런 상황에서 그냥 밑 없는 독에 물 붓기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기본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추경에 과연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전체적인 큰 틀에서.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번에 추경이 되든 안 되든 저희는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키워 나갈 생각이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진선미 위원님, 어떠십니까? 그래도 계속 가자?

○**진선미 위원** 예.

○**소위원장 조정훈** 예, 이것 예결위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김대식 위원** 예결위에서 나중에 정리하는 것으로.

○**소위원장 조정훈** 아까 말씀하신 톤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요.

5페이지 세 번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이 사업은 지금 국립대학 시설 확충 중에 의대의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의대 정원의 증원에 따라서 의대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려는 부분인데 요구 내용은 27년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따라 25년 수준으로 예산을 반영하자는 의견이시고 그 규모는 1432억 원입니다. 다만 이 사업 관련해서는 25년 당시의 증원 인원과 내년도 증원 인원 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부처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예산 증액 규모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위원장님, 증액 의견 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25년하고 지금 증액 규모가 좀 달라졌고 25년에 국립대학분이 806명이었는데 지금은 330명이고, 또 사업 추진 방식이 그 당시에는 급하게 편성하느라고 던키 방식으로 모든 것을 다 하나의 예산으로 담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추경이다 보니까 연내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조금 축소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저희 실무부서 의견은 올해 설계비의 50%를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82억 정도됩니다, 설계비의 50%.

○**소위원장 조정훈** 12억?

○**교육부차관 최은옥** 82억.

○**소위원장 조정훈** 82억.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소위원장 조정훈** 1400억에서?

○**김대식 위원** 1400억 원 주겠다고 해도……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제가 제안한 거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면, 위원장 자리에서 내려와서 말씀드리면 아시는 대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의대생들이 돌아왔고 지금 24학번하고 25학번 의대생들이 같이 수업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의대 학장님들하고 소통을 좀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아수라장이라고 합니

다. 옛날처럼 그냥 종이하고 칠판으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강당에서 학생 모아 놓고 가르치고 또 수업에 부담이 되다 보니 의사 출신의 교수 요원도 지금 다 구하기가 정말 어렵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지금 어려운데 그런 상황에서 약속됐던 1400억 원을 저희가 작년 예산 하는 과정에서 전액 삭감을 했기 때문에 학교 대학 측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좀 아픈 말씀을 드리면 교육부에서 의대에 지금 24학번·25학번을 다 가르칠 수 있나라는 의견을 수렴하는데 일부 대학의 입장에서는, 교육부에서 그냥 할 수 있다고 해라라는 취지로 약간 그런 쪽으로 계속 뉘앙스를 주면서 할 수 있다고 해라라고 해서 이것 필요하다 저것 필요하다고 하면 왜 이게 필요하냐 왜 저게 필요하냐라고 계속 이유를 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 1432억이 지금 추경 상황에서 좀 과할 수 있다는 생각은 동의합니다만 그래도 이게 어차피……

제가 보니까 이재명 정부에서도 의대 증원은 시기와 규모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방향은 변함이 없는 거지요, 차관님?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국립의대의 시설 확충을 시작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 한 톨도 늘려 주지 않고 학생만 수백 명씩 늘릴 노릇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이름이 뭐라고 했지요, 전쟁 추경? 저는 선거 추경이라고 생각하지만 하여튼 그 상황을 인정해서 적절한 비용을 이번 추경에 올리고 의과대학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의대생 증원을 하면 국가가 적절한 지원을 할 테니 너무 겁먹지 말라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82억보다는 좀 더 증액을 해서 예산을 제안드리고 싶은데 차관님 의견 어떠십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위원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동의하는데, 저희가 올해까지 다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실무부서에서 조금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얼마면 할 수 있으시다고요? 82억?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소위원장 조정훈** 82억은 진짜 다 쓰실 수 있으십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설계비의 50%니까요 다 쓸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어차피 예결위에서 또 한번 검토를 거칠 테니까 한 두 배로 해 놓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그러면 설계비의 100% 해 주시면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100% 해 두시고 살려 보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감사합니다.

○**김대식 위원** 164억?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소위원장 조정훈**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6페이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4번·5번 항목이 같은 취지여서 일괄 설명드리면 이 사업들은 서

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에 태양광 설비 확충을 위해서 3억 4000만 원씩을 각각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2건 다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지금 친환경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도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 한번 보셨어요, 차관님? 태양광의 모든 재료, 95%가 중국산이지요. 우리나라 태양광의 생태계가 다 죽었는데 이것 계속해서 중국, 필요하면 중국산도 쓸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걸 나중에 AS나 여러 가지 이렇게 했을 경우 한국에 대리점이 있기는 있지만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지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그걸 그냥 조달청에다 맡깁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어떤 부대의견도 안 달아 주고 ‘가능한 한 국내산으로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겁니까? 조달청에다가 돈 우리가 만들어 줄 테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가는 겁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알아서 하라기보다……

○김대식 위원 어때요? 실무진에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시지요.

○교육부대학시설지원과장 최문태 대학시설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달청에서는 태양광 관련된 자재나 이런 걸 선정해서 조달청에다 올리는데 올릴 때는 일정 사양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이런 걸 다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 자격이 되는 제품 일정 자격이 되는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 쓴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사를 해서 조달청에 등록을 하기 때문에 일정 품질 이상 된 것은 저희가 사용 가능한 걸로 조달청에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서울대학교하고 인천대학교가 태양광을 설치할 테니까 한 3억 4000 정도 예산을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요청도 없는데 교육부에서 고유가고 전쟁 발발하고 앞으로 심각하니까 선제적으로 돈 줄 테니까 해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어쨌습니까?

○진선미 위원 이것 김문수 위원님이 제안한 건데요.

○김대식 위원 제안을 한 건데 교육부의 시설과에는…… 이것은 김문수 위원님이 한 거고. 그래서 서울대나 인천대에서 협조 요청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교육부국립대학지원과장 안주란 국립대학지원과장입니다.

일단 인천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예산을 증액해서 주시면, 현재 송도캠퍼스에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미추홀캠퍼스에는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그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서울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른 국립대에 비해서 에너지 자립률이 낮은 편이어서 지원을 해 주시면 태양광 설비에 활용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대식 위원 하기가 지금 서울대학교 한 대학에서 쓰는 전기세가 한 도시를 능가해

요.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대학교나 인천대학교에서 아무런 요구 조건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교육부에서 일부러 ‘이렇게 해 줄 테니까 너희 할래, 안 할래?’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김문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이것을 추경에다 넣었기 때문에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충분히 백번 천 번 이해하고 동의도 합니다. 그러나 각 대학에서 안 하겠다고 하는데 교육부에서 ‘이건 돈 줄 테니까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요, 추경을 하는 데 있어서.

○**교육부차관 최은옥** 위원님,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국립대학에 대해서는 태양광 설비 하는 추경을 넣었는데 서울대와 인천대가 법인이다 보니까 빠져서 그것도 다른 국립대와 마찬가지로 추가를 하는 의견이라서 저희가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백승아 위원님.

○**백승아 위원** 지금 전쟁 상황에서 어쨌든 에너지 수급이 잘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나라가 전체적으로 다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아직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수준이 세계적으로 선진국과 비교해서 낮은 편이고 속도가 느린 편이고. 그럴 때 우리나라가 사막이 있어서 거기에 태양광을 다 설치할 수 있고 이런 조건이 아닌 상황에서 학교라는, 연구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공간이 있는 곳에다가 이 설비를 설치하고 이런 준비 하는 것은 에너지 비용을 감축시키기 위해서 너무나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안 한다 그래도 하라고 나라에서 권유하고 권장해서 해야 될 판이예요.

지금 학교 같은 경우에 방학을 하면 태양광을 멈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맞나요, 교육부?

○**교육부대학시설지원과장 최문태** 그러지는……

○**백승아 위원** 확인을 좀 해 주세요.

○**교육부대학시설지원과장 최문태** 예.

○**백승아 위원** 나중에 할 얘기였는데 말이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자체 해결만 된대요. 그러니까 태양광 설치를 해 놓은 학교도 방학이 아닐 때는 필요하니까 돌려서 쓰는데 방학 중에는 학교에서 소비가 많이 안 되니까 멈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산자위 위원님께. 그런데 이것 방학 중에도, 이미 공간도 확보해 놓고 설비 다 해 뒀으니까 돈 들여서 해 놓은 거니까 전기 생산해서 지역 주변 환경 다 살핀 다음에 주택가든 어디든 보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가.

그러니까 이것은 인천대나 서울대에서 우리가 하겠다 안 하겠냐를 떠나서 국가적 사업으로 걸쳐서 할 수 있는 공간에 조각조각 내서 다 돌려서 모아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교육부에서도 모든 학교에 다 설치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김용태 위원님.

○**김용태 위원** 저는 그냥 질문이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 국립대학 35개교가 편성돼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왜 국립대학법인은 본예산에 빠져 있던 건가요? 그 차이가 있나요? 법인이어서 뺐다가 이번에 추경에 넣는……

○**교육부차관 최은옥** 저희가 국립대학은 시설비를 시설비목으로 별도로 편성을 하고 법인은 출연금으로 전체를 편성하기 때문에 예산 구조가 달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용태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진선미 위원님.

○**진선미 위원** 김용태 위원님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질문 하려고 그랬거든요. 해소됐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알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정리해 나갈까요? 김대식 위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류?

○**김대식 위원** 예결위 때 다시 한번 이 질문을 할 테니까 차관님, 실무진하고 조금 더 의논을 해 가지고 오시면 우리는 교육부 편이니까, 하여튼 연구해 가지고 오세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알겠습니다.

○**진선미 위원** 안 해 주면 더 불공정한 거잖아요, 다른 국립대랑 비교해서.

○**백승아 위원** 예, 해야 돼요.

○**김대식 위원**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예결위 때 제가 이 질문을 다시 할게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소위원장 조정훈** 저도 마지막으로 예결위 때, 오늘은 답변이 어려울 것 같아서. 3억 4000만 원 각 대학에 주면 전기료 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 난다는 걸 아세요? 몇 와트를 태양광으로 생산한다는 그 계산이 있으세요?

○**교육부국립대학지원과장 안주란** 일단 3억 4000만 원 투자를 하면 저희가 140kW 규모의 태양광 설비 설치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되면 연 2700만 원 정도 전기료 절감이 예상됩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연 2700. 그러면 태양광 10년 써야 되는데 10년 못 써요.

○**김대식 위원** 10년 못 써요. 그리고 AS도 받아야 되고 노후화되고 감가상각도 있고 이러니까 사실은 앞으로 남고 뒤로 밀리는 장사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대규모가 아니면 그래요.

많이 연구해 가지고 오십시오.

○**소위원장 조정훈** 하여튼 예결위 가시면 숫자와 그런 것을 많이 논할 테니 절감 효과 등에 대해서 면밀히 준비하시길 요청드립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넘어가겠습니다.

7페이지 평생교육지원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이 사업은 19~39세 사이의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평생교육 이용권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고 1인당 35만 원, 총예산 소요액은 28억 3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취약계층 청년들에게 좀 더 배움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진선미 위원 이걸 제가 좀 보탬까 봐요.

○소위원장 조정훈 진선미 위원님.

○진선미 위원 저희가 이 문제를 증액하자고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살고 있는 취약계층의 20대 청년인데 아주 장문의 문자를 저에게 보내왔어요. 본인은 영어를 제대로 배우고 싶은데 기회가 잘 오지 않았고, 그래서 본인이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도 확인해 봤는데 10% 정도 할인하는 방식으로 돼서 접근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꼭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말씀을 주셔서 확인을 해 보니까 실제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조금 한계가 있고 보통 이게 청년들보다는 중장년이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지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어려우면 취약계층이 더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청년 문제도 있고 이래서 가급적이면 이번에 한번 이것을 좀 강화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감사합니다.

정부 측은 동의하신 거였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저는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사오십대 중장년층에 주로 많이 있는데 저소득층 청년 대상이라서 이번에 추경하는 것의 대상에도 되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소득층 청년이고.

그리고 고용노동부 사업에도 이런 유사한 사업이 있을 텐데, 내일배움카드 같은 것들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교육에 해당되는 것은 없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취업을 전제로 하는……

○강경숙 위원 취업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청년들이 졸업을 했지만 공부도 좀 더 하고 싶고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추경의 방향에는 되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준환 위원 저도 한 가지……

○소위원장 조정훈 김 위원님.

○김준환 위원 저희 폴리텍대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폴리텍대학이라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과는 약간 차이가 있겠지요. 그러나 겹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을 비교 평가해서 예산과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한번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저도 추가로 같은 취지로, 신규사업이라 이걸 어떻게 디자인할지 좀 궁금한데, 이 내용 설명에 보면 19~39세 청년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저소득층이라는 정의는 취약계층하고 똑같은 겁니까?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교육부차관 최은옥 저희가 저소득층으로 해 놓으면 사업을 설계할 때 보통 기초·차상위를 먼저 하고 그것으로 인원이 채워지면 마감을 하고요.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그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경제적으로는 기초·차상위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19~39세, 다는 아니지만 19~25세까지는 대학생인 경우도 많은 텐데 그러면 이 대학생들도 대상입니까?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장 김주연** 기초·차상위 청년에 대해서는 신청이 가능하고, 만약에 다른 정부 재정 지원을 받지 않으면 현재로서는 가능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기초·차상위 학생은 대학생이라고 하면 거의 십중팔구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다니고 있을 텐데 그러면 그 대학생이 청년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금을 또 신청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이 학생은 대학 교육 외에 이 교육을 또 받는 겁니까, 평생교육을? 그건 디자인상 좀 과하지 않나요?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장 김주연** 지금 대학에서는 대학 교육과정에 따른 부분을 받는 거고요.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대학 교육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추가적인 평생교육 필요성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내용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저는 진선미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 학생도 이해가 되는데 장문의 편지를 보낸 친구가 대학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평생교육이라는 정의하에서 지금 대학 교육을 받고 있는 친구에게 또다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게, 지금 평생교육의 기회가 차고 넘쳐서 도저히 이제 평생교육 받을 사람이 없다 그리고 돈이 남으면 모를까 지금 평생교육 수요가 이미 있고 예산이 부족한 판에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들에게도, 그러니까 대학원생들도 지금 받을 수 있는 거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위원장님, 저희가 실무 부서에서는 일단 말씀드린 대로 설계를 했는데 그 부분은 소위에서 정해 주시면 대학생 아닌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위원** 지금 실무 부서의 국장님이십니까?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장 김주연** 평생학습정책과장입니다.

○**김대식 위원** 담당 과장님이 지금 이해를 잘 못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안 돼요, 원래. 지금 대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으면 평생교육을 따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오버랩이 되기 때문에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못 받은 사람이 내가 자아실현을 하겠다, 국가에서 이런 시스템으로 해 주면 참 좋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해 줘야지 대학에서 공부하고 또 국가장학금 주고 하는데 거기서 또 한다?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대학생들은 아니에요. 대학생들은 아니고 대학원생도 아니고 소외계층, 그러니까 학습능력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야 될 거예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렇게 설계를 하겠습니다, 정해 주시면.

○**진선미 위원** 그러니까 이게 1년에 35만 원 이용권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9000명 정도 대상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폴리텍대학은 실제로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서 교육의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이용권은 그것과는 좀 다른 문제여서 충분히 프로그램 설계 과정에서 이런 우려들을 배제시킬 수 있다고……

○**김대식 위원** 존경하는 김준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폴리텍대학은 교육부가 아니고 노동부 산하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00% 국비니까 그런 부분……

○**교육부차관 최은옥** 정규 대학에 취학하지 않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설계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예, 그렇게 설계를 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고등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은 제외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소위원장 조정훈** 그리고 두 번째는 그 9000명은 무슨 기준으로 만드신 겁니까? 9000명의 근거는 뭐였습니까?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장 김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19~39세 청년이 350여만 명이고 그중에 기초·차상위 계층이 한 40만 명으로 인구통계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저희가 작년에 지원된 인원 중에서, 기초·차상위가 대부분 이긴 하지만 청년 지원 인원이 약 3만 1000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차상위 40만 명 중에서 약 8% 정도 지원이 됐었는데요. 한 9000명 정도 하면 4만 1000명 정도 해서 한 10% 정도 지원 가능할 걸로 해서 지금 9000명 정도 나온 걸로 그렇게 추산이 됩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19~39세 연령대가 우리 대한민국에 350만이 있다.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장 김주연** 19세~39세는 1278만 명으로 행안부 통계에 나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그중에 기초·차상위가 몇 만?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장 김주연** 기초·차상위가 40만 명이고……

○**소위원장 조정훈** 19~39세 기초·차상위, 그러니까 이 사업의 대상이 40만. 그런데 만약에 대학생들을 제외하면 좀 줄어들겠지요. 그러면 그 모수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은? 그 모수에서 9000으로 가게 된 근거가 지금 소진율을 90이라고 했으니 그건 알겠고. 이게 계산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어진 예산이 28억이었으니까 이 안에서 했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장 김주연** 그러니까 기존에 지원된 인원은……

○**소위원장 조정훈** 기존에 뭘 지원했다는 거지요?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장 김주연** 작년에 저희가 평생교육 이용권이……

○**소위원장 조정훈**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데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저희가 연령 제한 없는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연령 제한 없는 게.

○**소위원장 조정훈** 아, 그게 있었다?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장 김주연** 예, 19세 이상 전체 대상으로 하는 바우처 사업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중에서 청년 지원 인원이 작년에 3만 1000명이었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래서 3만 1000명이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그 3만 명의 10%……

○**진선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충분하면 전체 인원을 다 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

니까 그래도 한 10% 정도로 해서 좀 올려 보자 이거지요.

○소위원장 조정훈 아니, 그것도 이해가 되지만 작년에도 이미 그 학생들은 신청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혜택을 받은 것 아닙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일부 8%가……

○소위원장 조정훈 3만 1000명이 신청해서 혜택을 받은 통계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장 김주연 예.

○소위원장 조정훈 그 사업은 올해도 또 있는 것 아니에요?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장 김주연 예, 그 수요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신청이……

○소위원장 조정훈 그 수요라는 통계가 있어요?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장 김주연 예, 신청에 비해서……

○소위원장 조정훈 신청인은 얼마였습니까?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장 김주연 신청 인원은 시도교육청별로 다 다른데요 17개 시도별로 지자체에서……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니까 그 총합이 얼마입니까?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장 김주연 시도별로 다르긴 한데 시도 배정 인원의 한 1.5~2배 정도 신청을 해서 저희가 수요에 대해서는 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3만 명이 혜택을 받았으니 6만 명이 신청했다고요? 그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장 김주연 6만 명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위원 과장님, 이게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님께서 아주 고심 끝에 그거 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추경이라는 것이 돈이 넉넉하고 나랏돈이 많으면 아예 풍족하게 줘도 되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그냥 국회에서 돈을 배정하니까 우리가 억지로 맞추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가 세금은 한 푼이라도 절약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걸 좀 검토를 하고.

방금 조정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왜 근거가 이렇게 있는 건지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는 입장이니 뭐가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막무가내로 교육부에서 9000명 가져왔으니 ‘그래, 오케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정확하게 분석해서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장 김주연 예, 제출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지금까지 검토한 기조를 유지해서 오늘은 원안대로 의결 처리를 하되 예결위에서 분명히 기재부에서 저 이상으로 검토·검증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어를 하게 해 주시면, 지금 설득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판단입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소위원장 조정훈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이 사업은 권역별 거점학교를 지정해서 진로 미결정 직업계고 졸업생들에게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경 내용은 7개 학교를 추가 선발하자는 제안 의견이시고 설명을 드리면 현재 26년 예산에는 27개가 반영이 돼 있고 추경에는 3개교가 추가돼 있습니다. 요구한 사항은 7개교를 추가하는 내용이고 예산은 7억 원 증액 규모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아 위원님.

○백승아 위원 지금 국가데이터처 2월 자료를 보니까 청년층 취업자가 14만 6000 감소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7.7%, 5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는데 쉬었음 청년이 48만 명에 이른대요. 그런데 단기적인 경기 요인이라고 보기에는 좀 심각한 수치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미취업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데, 그래서 청년 고용을 위한 조금 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본 사업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을 보면 직업계고 졸업생 중에 진로 미결정자인 20% 학생들이 미취업인 상태로 사회로 진입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장기 미취업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졸업 직후가 골든타임이니까 저는 이 사업이 되게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민생 추경 기초랑도 부합한다는 입장인데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추경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회성 지원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 구상 과정에서도 이런 청년 고용 문제의 심각성을 교육부가 인지하시고 기존 사업뿐만 아니라 이것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쉬었음 청년이 48만 명에 이른다는 게 사실은 저는 너무 충격적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추경뿐 아니라 기존 사업을 벗어나는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차관님?

○교육부차관 최은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이번 추경에도 이것 말고도 쉬었음 청년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를 구상했는데 급한 민생 추경이다 보니 그게 반영이 안 됐고요 이거라도 꼭 필요합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백승아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백승아 위원 그러니까 인재양성 부트캠프 이런 것도 비슷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내년도 사업 구상하실 때 청년 고용 문제 부분 더 적극적인 정책을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말씀하신 것 너무 적극 동의가 되고요. 다만 이런 좋은 선의에서 하는 사업도 성과관리가 제대로 되고 후속적인 조치들도 촘촘하게 이루어져야만 실효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나면 권역별 거점학교가 있는 곳과 또 그렇지 않은 곳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취업률이 정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건지, 실제적으로 이 안

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냥 선의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성과가 나오는 것으로 관리가 되는지는 꼭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저도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큰 틀에서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학생들의 취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 지점이 꼭 대학이 아니라 이제는 고등학교까지 확대 또는 옮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진학을 자체도 조금씩 줄어든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강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성과관리는 필수고요.

수정 이유로만 봐서는 권역별 거점학교를 늘리실 것 같은데 권역별 거점학교는 다 직업계고만 해당합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취업 지원 안 합니까?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도 졸업하면 다 100% 대학 가는 그런 고등학교가 있나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취업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인문고에서도. 그런데 일단 특성화고가 570개교가 있는데 여기에 아직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특성화고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게 과연 맞는가. 그러니까 인문계 고등학교는 100% 대학 진학이라는 전제가 현실이 아닌데 그리고 숫자적으로 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다수의 학생은 아직은 인문계 아닐까 짐작하는데. 맞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맞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이렇게 가는 방향성이 맞는지, 하실 말씀이 있으신 듯한데……

○**교육부차관 최은옥** 담당 과장님이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직업교육정책과장 이진우** 직업교육정책과장입니다.

저희가 거점학교에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필요한 친구들은 시도교육청에 거점학교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학교들에 인문계 졸업생들 찾아오면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여기에 늘려 주시면 꼭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만 대상이 아니고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원하는 친구들까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재학생이 아니라 졸업생에……

○**교육부직업교육정책과장 이진우** 그렇습니다. 졸업한 이후에 쉬었음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가 조기에 개입해서……

○**소위원장 조정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정성국 위원님이 안 계셔서 궁금하긴 한데 계속, 법안심의하면 좋은 서비스지만 교원들에게 부담이 간다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백승아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또 교사가 해야 되는 거지요, 이것도?

○**백승아 위원** 저한테 물으셨으니까, 법안심사할 때 저는 항상 원인과 결과를 논리적으로 설명드렸지 교사가 힘들어서 안 된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함에 있어서 이 역할은 또 교사가 하는 겁니까?

○교육부직업교육정책과장 이진우 저희들 예산에 전문인력들을 채용할 수 있는 예산들이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사들이 총괄해서 관리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사들은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주하는 인력들이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그 학교에 근무하면서 노하우를 쌓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정책을 디자인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예, 알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그리고 직업계고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 취업에 가장 적극적이고 항상 가슴 아파하십니다. 열심히 하실 겁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위원 수정 이유에 방금 말씀하신 것을 넣어 가지고 인문계고, 여기서 꼭 직업계고로 한정하지 말고 그렇게 하게 되면……

○교육부직업교육정책과장 이진우 학교는 거점학교인데 일반고 졸업생들까지 서비스를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예,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싶어요.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증액은 7억으로 가는 걸로.

김용태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김용태 위원 예.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7억 증액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이 내용은 통합교육청 출범에 따라서 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하는 내용이고 정보시스템 통합이 60억 원 그리고 학교 환경 재정비 등에 60억 6000만 원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120억 6000만 원 증액하는 데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어차피 통합이 되니까 통합해야 되겠고. 그런데 시스템에 120억 60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꼭 들어가야 됩니까? 금년에 이것을 다 소진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아마 행정적 절차하고…… 전남광주가 되면 당분간은 전남은 전남, 광주는 광주 같은 이걸로 운영을 하다가 점차적으로 시스템이 통합이 돼야 되거든요, 원래. 그렇잖아요? 학교도 통합을 할 때 바로 전산시스템이 100% 되는 게 아니에요. 양쪽에서 운영하다가 단계별로 이렇게 하는데 120억 6000만 원 추경을 해 가지고 올해 이게 다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필요한 것만 이야기를 하고 점차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전산시스템은 그렇게 가야 돼요. 바로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교육부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부단장 지혜진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 부단장 지혜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양 교육청 간 시스템이 분할돼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통합 과정에 있는 것들은 사실은 이번 추경에는 담지 않았고요. 7월 1일부터 합쳐진 교육청이 최소한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통합된 업무 포털 하나 그 정도는 있어야 되고 기록 관리 부분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120억 6000만 원 중에서 60억 원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금년 단계가 꼭 120억 6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1단계가 그렇다는 거지요?

○**교육부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부단장 지혜진** 예, 업무를 최소한 추진할……

○**김대식 위원** 그러면 내년에 2단계 3단계는 더 추가가 될 거 아니에요?

○**교육부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부단장 지혜진** 예, 맞습니다. 최소한의 대민 서비스와 업무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전체를 얼마나 예측하십니까? 전체 완전 100% 통합이 되었을 때?

○**교육부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부단장 지혜진** 양 교육청에서 시스템 통합을 위해서는 최소 800억 정도 내년부터……

○**김대식 위원** 800억?

○**교육부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부단장 지혜진** 왜냐하면 지금 양 교육청별로 다 따로 따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시스템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800억은 전자시스템이고 그다음에 학교·교육청별 사인보드라든지 또 여러 가지 통합에 따르는 각 기관의 그런 것은 얼마 정도 예측하니까?

○**교육부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부단장 지혜진** 지금 120억 6000만 원 중에 60억 6000만 원 정도가 최소한의, 외벽의 간판을 바꾼다든지 이런 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백승아 위원님.

○**백승아 위원** 제가 궁금한 게 행정통합이 되면서 교육청도 어쩔 수 없이 통합해야 되니까 드는 돈이잖아요?

○**교육부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부단장 지혜진** 예,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제가 이거 질문할까 말까 엄청 고민했는데. 지금 김문수·정성국·문정복 위원님이 아무도 안 계셔서, 행정통합에 예산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추경에서 이것을 해야 되나요?

○**교육부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부단장 지혜진** 7월 1일 자로 바로 통합교육청이 출범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승아 위원** 사전 작업이 필요해서?

○**교육부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부단장 지혜진** 예, 맞습니다.

○**백승아 위원** 미리 해야 되니까요?

○**교육부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부단장 지혜진** 예.

○**백승아 위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통합법안 교육부에서도 의견을 내고 했잖아요. 그럴 때 교육감의 권한, 여러 가지들을 많이 떼 주는 상황에서 당연히 그러면 그 예산에서 교육청 통합에 드는 돈도 대 줘야지 약간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것을

추경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사전에 해야 되기 때문인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백승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가 이번 예산에 담기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도 그렇습니다만 일반 자치도 사실은 7월 1일 정식적인 출범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경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대식 위원** 또 계속 제가 질문하는데, 7월 1일 자는 맞아요. 7월 1일 자로 통합을 해서 가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추경을 해서…… 왜 그러냐면 모든 기구가 반으로 줄어들잖아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교육감도 두 분에서 한 분으로 줄어들고 여러 가지 시스템에서 거기에 대한 절약된 돈이 있고 지금 각 교육청, 전남교육청·광주교육청에 남아 있는 돈도 많아요. 그걸 가지고 우선 처리를 하면 되지 꼭 추경까지 해서 이걸 도와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것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60억 정도는? 어때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지금 이 통합법이 결의가 된 상황에서 보면 사실은 전남이든 광주든 교육비 관련된 올해 예산은 통합이 담겨져 있지 않은 그런 예산이고요.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항목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마 전남이든 광주든 교육비특별회계에 통합과 관련된 예산은 담겨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7월 1일 자 통합을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될 가장 기본은 대국민서비스나 그다음에 학생들을 위한 그런 기본적인 필수경비는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대식 위원** 당연하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그런데 6월에 또 선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예비비로 쓰기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저희는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 자치도 그렇고 저희 교육부도 그렇고 이번에 추경에 담아서 가장 필요한 정도의 금액은 그래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지원하는 거는 맞는데 전남교육청하고 광주교육청에 예비비가 충분하고 지금도 돈을 그걸 해 가지고 태블릿 PC고 뭐고 박스, 내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박스폐기로 아직까지도 공급 안 하고 창고에 처박혀 놓은 상태, 그런 예산만 절약을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한번 자체적으로 너희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나 해 가지고 추경을 해 주고 2단계 3단계 갈 때는 내년 예산에서 우리가 해 줘야지, 당연히.

그런데 이번 추경은 굉장히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전쟁 발발하고 고유가·고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억지로 추경하니까 교육부에서 몇억은 따 와야 되겠다 이런 사고는 버려라 이거지, 부처 이기주의를 버려라 이거지.

○**소위원장 조정훈** 다 하셨습니까?

차관님, 말씀해 주시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제가 마저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있어서의 지출에 대한 효율화는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고 위원님들께서 회의 때마다 말씀 주셔서 지출 구조조정과 효율화는 저희 교육부뿐만 아니라 17개

시도교육청이 같이 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거는 그 트랙대로 가고 이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지금 저희가 이것 120억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저희가 잡은 게 아니고 광주하고 전남하고 추진단이 있습니다. 그 추진단과 협의를 통해서 최소한 비용은 이 정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협조가 필요하더라고 하는 얘기를 저희가 들어서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번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7월 1일자 광주·전남에 대한 통합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최소한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추경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저도 질문을 드리면……

○백승아 위원 저 하고……

○소위원장 조정훈 미안합니다. 백승아 위원님.

○백승아 위원 저는 이미 예산이 약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왜 추경에 넣었는지가 궁금했던 것이지, 그래서 사전에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라고 답변을 주셔서 납득이 됐고요. 교육청 자체별로 돈이 남아도는데 할 수 있지 그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총 한 18조 정도 불용되지 않았나요, 한 3년 동안?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예, 3년간 세입결손이 있었습니다.

○백승아 위원 그때 사업이 다 미뤄졌어요, 학교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당장 돈이 없으니까 줘야 되는 돈을 안 줬으니까 미룬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거 하기도 사실 벅찬 상황에서 돈이 남아돈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교육위가 아닌 의원님들께 그런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요, 교육청에 돈이 남아돈다. 학교 상황, 현장 상황 등을 잘 모르시는 거지요. 남아도는 돈을 일반행정에서 갖다 써야겠다 이런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하셔서 제가 이 부분은 정정을 하고 가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 남아돌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저도 질문하고 그다음에 김용태 위원님.

7월 1일 출범하니까 통합특별 교육청이 작동은 해야겠지요. 그런데 아까 재정실장님이라고 그러셨나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실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질문이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에듀파인과 NEIS 등 정보시스템 통합이 60억이고 학교 및 교육행정 시설·환경 재정비가 60억 6000인데 에듀 NEIS는 제가 곧 질문드리겠고.

학교 및 교육행정 시설·환경 재정비에 왜 또 60억이나 들어간 겁니까? 학교를 통폐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그건 아닙니다.

○교육부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부단장 지혜진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건물 외벽에 있는 예를 들어 ‘전남교육청’ ‘광주교육청’ 이런 것들도 다 교체를 해야 되고, 이거는 일반 지자체도 마찬가지인 부분이고요. 공임이나……

○소위원장 조정훈 예, 이해했습니다, 뭘 소리인지.

두 가지인데. 그러면 통합특별 교육청을 출범하는 과정에서 에듀파인 NEIS 등 정보시스템 새로 만들어야 된다. 알겠는데 그러면 전남과 광주 양 교육청에서는 이 사업을 위

해서 쓰는 예산은 없습니까?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입니까, 통합이?

○**교육부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부단장 지혜진** 일단은 지금 단기간에 시스템 합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앞에 대부분……

○**소위원장 조정훈**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부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부단장 지혜진** 지금 당장 잡아 놓은 예산은 없어서 저희한테 요청……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니까 각 전남교육청 광주교육청은 에듀 NEIS 등 정보시스템 통합에 예산이 1도 안 들어간다, 이게 맞나.

두 번째, 실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해 가지고 예산 항목 간에 이월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전남도의회에 가서 광주시의회에 가서 이월 신청해야지요. 7월 1일이 되면 그 이후에 에듀파인 NEIS 운영비 안 들지 않습니까? 명백하게 절약되는 예산이 눈에 보이는데 그러면 그거는 어디다 씁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 17개 시도교육청의 예산편성 과정을 보시면 어느 교육청이나 교육비특별회계는 아마 12월 말에, 올해가 26년이기 때문에 25년 12월 말에 마지막 의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때는 법안이 통과가 되기 전이었고 그다음에 예산편성 과정은 9월이나 10월에 모든 교육청에서 그다음 연도의 예산에 대해서 신청을 의회에 하기 때문에 여기에 통합과 관련된 예산이 담겨 있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걸 바로 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광주든 전남이든 올해 NEIS나 에듀파인과 관련된 통합을 위한 통합 경비가 담겨져 있지 않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위원장 조정훈** 아니, 그건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실장님.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월할 수 있도록 각 의회에 가서, 광주의회 가고 전남의회 가서…… 7월 1일부터 안 쓰게 되는 비용이 너무 명백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광주교육청 없어지는 거고 전남교육청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2개가 통합이 되는데……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니까요. 그러면 2개가 하나가 되니 절약되는 비용들이 있는데 그건 당연히 여기에 투입을 해야 되지 그건 그대로 두고 국비를 넣어야 된다는 게 어떻게 그게 합리적인 그리고 꼼꼼한 예산 운용이라고 주장하십니까, 지금?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저희가 가장 필요한 부분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소위원장 조정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7월 1일 통합되면서 에듀파인이나 NEIS 시스템이 문제없이 작동돼야 된다는 건 다 동의한다고요. 그러면 이걸 누가 부담해야 되냐는 질문인데 필요하면 국비 일부 넣을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기본은 교육자치이기 때문에 각 교육청에서 할 만큼 했다는 그걸 보여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대식 위원** 자구 노력.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예, 자구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구 노력이 필요한데……

○**소위원장 조정훈** 지금 전남·광주교육청에서 에듀파인 NEIS 정보시스템 통합에 예산 투입이 1원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지금 여기 통합시스템이 에듀파인과 NEIS를 운영하는 경

비 부분보다는 전남교육청의 기본적인 포털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기본적인 포털, 2개를 합치는 부분에 대한 시스템 비용이 이 정도의 액수가 든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아니, 그 2개를 합치든 3개를 합치든 그건 당사자 교육청에서 원래 원칙적으로 처리하는 게 교육자치고 교부금의 원칙인 거예요. 그리고 중앙이 봐서 합리적으로 이걸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추가적으로 주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전남교육청·광주교육청 예산 지금 얼마 불용될지 보셨습니까? 연말에 가면 반드시 불용액 나오지 않겠습니까, 청산하는 과정에서? 왜냐하면 올해 예산이 통합을 예정하지 않고 짠 거지 않습니까, 맞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예, 통합을 예정하지 않았습시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니까요. 반드시 불용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불용 금액은 얼마입니까? 아십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불용은 저희가 연말에 결산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냥 일반적인 말씀이라도 드려 보면 3년간의 세수·세입결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 중에서는 100% 인건비를 담지 못하는 교육청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시설비나 학교운영비를 산식에 맞게끔 100% 담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가 지방교육재정과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런 교육청도 있고 열심히 그리고 꼼꼼하게 알뜰하게 살림해서 잘 운영하는 교육청도 있어요. 맞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예.

○소위원장 조정훈 왜 그 얘기는 안 하세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전반적인 부분을 말씀을……

○소위원장 조정훈 그게 전반적인 상황이 아닌 거예요, 교육청마다의 특수한 상황이지. 그걸 왜 일반화시키세요?

○백승아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조정훈 일단 김용태 위원님 먼저 손 들었기 때문에.

○김용태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좀 다른 내용인데, 어쨌든 저는 이 사업에 교육청이 지방비를 투입 안 한다라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요. 교육부에서 제출한 사업 중에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현금성 살포가 약 6000억입니다. 실장님, 혹시 교육부에서 냈던 자료 중에 전남교육청이 얼마를 차지하는지 아세요? 1000억 이상, 1300억 원을 전남 학생들한테 에듀페이로 현금성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예.

○김용태 위원 그때 당시에 전남교육청에서 올해부터는 중고등학생들한테 1300억 플러스 총 400억 원을 더 지급하겠다고, 그래서 계획대로라면 1700억 원 정도가 전남청에서 현금성 살포를 하는 것인데요. 그때 국정감사 때 교육부 기조실장님께서도 동의하셨던 부분인데 교육부에서 페널티를 부과해야 된다 동의했었고 페널티 기준을 상향하겠다고 했었습니다.

다른 내용이긴 한데 이 사업에 전남교육청의 지방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투입을 안 한

다라고 해서 국비만 전액 지원하는 건 저는 납득이 잘 안 가는데요. 자구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자구 노력이 당연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게 전체를 커버하는 비용은 아니고 저희가 보기에 가장 필수적으로 최소한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커버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실장님, 그러면 그 800억 통합비용 중에 국비는 120억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추가 국비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그것은 예산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또 지금 말씀 주셨던 통합지원금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이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백승아 위원님 그다음에 김준환 위원님.

손 든 순서대로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두 집이 살림을 합치는데 갑자기 돈이 절약된다는 게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아까 위원장님도 그렇고 김용태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보세요. 각자 따로 살림하던 집이 합쳐요. 그러면 일단 초반에 플러스알파로 돈이 더 들지요. 유보통합이 그런 거잖아요. 합치면 당연히 초반기에는 돈이 더 듭니다. 어떻게 돈이 안 들어요, 당연히 들지?

그리고 자꾸 자구 노력 하시는데 앞으로는 당연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겠지요. 그런데 처음에 교육청에서 합친다고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교육청 보고 나라에서 합치라고 한 것이고 교육은 같이 그냥 합쳐진 거고.

예산이라는 게 그렇게 갑자기 내 마음대로 과목 변경하면서 쓸 수 있으면 얼마나 계산하기 편하겠습니까? 가정 살림이랑 달라요, 교육재정이라는 게. 항목에 맞지 않는 건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비비도 그냥 우리 생각 같아서는 ‘효율적으로 예비비 갖다가 쓰고 알아서 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산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게 막 쓰면 잘못하면 횡령되는 거고요. 그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항목에 맞게 써야 되고. 그래서 점점 사회가 분화되고 복잡해질수록 행정이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되니까. 자구 노력은 앞으로 당연히 할 거라고 보고 저희 국회가 잘 감시할 거고요.

지금 당장 필요한 금액, 통합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만 지금 말씀하신 거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예, 말씀하신 대로 자구 노력은 기본적으로 두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승아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할 거고요. 그렇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현 상황에서 만약에 저희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면 이 정도가 그래도 올해 7월 1일 날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라고 생각해서 이번 추경에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승아 위원** 앞으로는 교육청별로 아껴서 절약해서 잘 써서 필요한 돈은 다 하실 거고, 지금 초반에 통합을 해야 되니까 필수불가결의 필요한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는 돈이다 이런 말씀이지 않아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예, 저희도 그렇게……

○**백승아 위원** 이름도 같아 껴서 붙여야 되고 시스템도 통합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드는 돈이라는 말씀이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저희는 최소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로 계산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백승아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이어서 김준환 위원님.

○**김준환 위원** 제 계산이 간단해서 그런지 몰라도 전남하고 광주하고 통합을 하면 경제적 여유분이 생깁니까, 부족분이 생깁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초기에는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어서 말씀을 다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전남과 광주에 각각 지원하고 있는 단가도 다르고 또 교육청마다 지원하는 학교운영비도 다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더 많이 들 겁니다.

○**김준환 위원** 실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지금은 부족분이 많이 생겨서 중앙정부로부터 얼마의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하다 보면 우리가 자생력을 갖게 돼서 우리가 독립적으로 전남·광주의 교육청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되고, 부족분이 생겼다 그러면 그 부족분을 지금 당장 어떻게 처리하고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채워 나갈까라는 것을 설명하시면 되는데, 부족분이 있는 건지 여유분이 있는 건지 설명이 분명하지가 않아 가지고 모르겠어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죄송합니다.

○**김준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김용태 위원님 질문 들어 보면 작년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위원장님 말씀 들어도 그렇게 부족한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로서는 저는 여기 초임자입니다마는 도대체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없다면 어떻게 채워 나갈 건지, 나라 살림 채워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예.

○**김준환 위원** 그다음에 있다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반납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저는 교육부 측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제가 간단하게 요약 말씀 드리면 현 상황에서 2개 교육청에서는 통합과 관련된 경비 예산은 없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드리는 말씀은 통합 이후에 들어갈 경비는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 시설 여건과 각종 수당 이런 부분들을 상관해 보면 더 많이 들 거라고 예상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시도교육청 특히 지방교육행정기관에 관한 운영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맞습니다. 그걸로 다 커버를 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고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후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비용들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에 있는 첫 번째 전제에 따라서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국가 차원에서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필요한 경비는 지원해 주시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그런 요청으

로 이번에 추경에 담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만약에 이게 예결위 가서 증액이 동의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7월 1일 날 안 만드실 겁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 저희도 계속……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어떻게하실 생각이세요? 플랜 B가 뭐예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전남과 광주 교육행정추진단이 있습니다. 플랜 B는 지금 계속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그 단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어떻게 할 거냐 경비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고 그 논의 속에서 첫 번째 나온 게 이 정도는 사실 중앙정부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지원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담았고요. 만약에 이번 추경에 담기지 못한다면 그 부분은 2개 교육청과 함께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될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이해했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추가 발언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이 사업은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인데요. 쉬었음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학과 기업이 함께 단기집중 교육훈련을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경예산안에는 40개 사업단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20개 사업단을 추가하기 위해서 14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부트캠프는 기존에 대학에서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번 추경은 대학에 재학하지도 않고 일자리도 갖고 있지 못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신규사업인데 기존에 있는 사업은 대학생들을 인재양성 부트캠프 수혜 대상으로 본다면 이것은 비재학생 휴학생 포함 이런 겁니까, 아니면 대학에 적이 없는?

○교육부차관 최은옥 휴학생은 아니고요 대학에 적이 없고 취업도 하고 있지 못한 학생들 대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소득 기준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소득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쉬었음 청년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청년이라고 하면 19~35세?

○교육부차관 최은옥 34세.

○소위원장 조정훈 34세, 죄송합니다. 19~34세 중에 대학을 졸업했지만 쉬었음도 괜찮고 하여튼 이 기준이 지원 당시 대학생이 아니고……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고졸 청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기존에 하고 있는 건 대학생들을 위한 거고. 그래서 40개 사업단을 운

영한다고 하셨는데, 진선미 위원님께서 지금 20개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40개 사업단은 지역적으로 나눠진 겁니까, 뭘니까? 사업단이라는 게 뭐예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이것은 대학만이 하는 게 아니라 대학이 기업하고 해서 기업에서 당장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첨단산업에 있어서 기업에 필요한 역량을 대학에서 6개월 정도의 단기과정을 통해서 키워 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단이라고 부르고요.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대학과 기업이 사업단을 구성하는데 교육훈련 부트캠프니까 훈련은 대학에서 하는 거고.

○**교육부차관 최은옥** 맞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런데 그 훈련 대상은 그 대학생이 아닌 사람들이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이번 추경에 담긴 것은.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대학은 대학생이 아닌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도 아니고 이런 훈련을 하는 거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40개 사업단이라는 것은 40개 대학이 선정된다는 겁니까, 앞으로? 그런데 20개를 더 증액하면 60개 대학이 선정된다는 뜻입니까, 60개 기업과?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이 선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40개 사업단은?

○**교육부차관 최은옥** 40개 사업단은, 기존에 4년제 대학에서 이 부트캠프를 하고 있는 사업단이 88개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미 하고 있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 대학을 위주로 하고, 4년제 대학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전문대학은 지금 하고 있지 않아서 전문대학은 신규로 대학이 기업과 연결해서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평가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 이 예산의 수혜 학생의 숫자가 얼마입니까, 청년? 청년 몇 명이 지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평균적으로 교당 한 100명 정도 됩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교당 100명?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이 사업을 선정해서 우리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을 모집해서 훈련을 해서 결국 취업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대학은 그냥 훈련만 시키면 끝나는 거고 취업의 책임은 없는 거고, 그러면 이 파트너가 된 사업단에서 고용할 의무도 없는 거고.

○**교육부차관 최은옥** 고용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이 친구들은 6개월 훈련받고 취업 못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소위원장 조정훈** 이게 언제 시작된 프로그램입니까? 작년입니까, 올해입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202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2023년부터 시작한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통해서 취업한 학생, 훈련생 대비 취업생이 몇 %나 나오니까, 이게?

○교육부차관 최은옥 저희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열에 몇 명이 취업합니까?

○교육부인공지능융합인재양성과장 이지현 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융합인재양성과장 이지현입니다.

지금 취업률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2023년에 그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취업 통계가 나오는 시점이 실제 산정 시점과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통계조사를 기준으로 보면 2023년에 졸업하거나 그다음에 2024년 2월에 졸업한 학생들의 통계가 2025년 12월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저희가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통계조사와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았고 2026년도 통계부터는 연계해서 조사하기로 해서 올해 말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취업자 통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길게 설명하셨지만 지금 성과 없음이잖아요, 성과 모름.

○교육부인공지능융합인재양성과장 이지현 성과 없음은 아닙니다. 저희가 자체 통계……

○소위원장 조정훈 아니, 제가 지금 말하니까요.

○교육부인공지능융합인재양성과장 이지현 예.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니까 아직…… 자체 통계는 있어요, 그러면?

○교육부인공지능융합인재양성과장 이지현 자체 통계를 저희가 대학별로 조사를 하게 시켰더니 이게 학생의 자발적인 의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건 이제는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교육부도 우리 대학생들의 취업을 도와주자, 이거 동의해요. 그런데 효과가 있어야지 예산을 투입하는 거 아닙니까? 돈이 하늘에서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올해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그 대학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니 제가 볼 때 대학교에는 약간의 인센티브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학도 자신들의 졸업생 취업률이 굉장히 중요한 성과지표니까 총장부터 다 관심이 있을 텐데 이걸 비재학생이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학교 학생도 아닌데 밤에 와 가지고 6개월 학교 다녀. 공부하고 취업했어. 안 했어. 이거를 어떤 교수가 진지하게 폴로업을 하겠습니까?

기업도 채용 의무가 없다고 하셨지요? 돈 받고 강사 몇 명 보내 가지고 가르쳐 주고 끝내는 거 아닌가. 아니, 이런 디자인에서 과연 누가 이걸 총괄 책임을 지느냐.

이거 지금 140억 증액까지 더하면 전체 사업예산이 얼마가 됩니까, 차관님?

○교육부차관 최은옥 현재 283억이 들어가 있고요.

○소위원장 조정훈 283억 더하기 140억, 약 400억 원 해서 지금 몇 명이 추가로 취업할지에 대한 예측치가 있으세요? 이 사업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 청년 몇 명이 추가로 창업할지에 대한 예측치가 있으세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이거는 6개월 단기 부트캠프이기 때문에 이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이것만으로 사실 취업이 됐다 안 됐다는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이 사업을 왜 하나고요? 이 사업을 왜 하는 거예요? 시범사업을 해 보든지. 그러면 시범을 해 보고 성과를 검증한 다음에 확대하겠습니다 하면 이게 합리적이지. 결과도 없으면서 지금 전쟁 예산 한다면 또 늘려 달라고요? 이건 무책

임함의 절정이지요.

아니, 결과가 있어서 400억 투입했는데 청년이 몇 명 취업했고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했으면 여기 교육위원들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차관님? 그런데 지금 평가도 안 돼 있고 아무리 합리적인 추정을 해도 이 사업단을 구성하는 대학과 기업에서 책임감 있게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질 것 같은 구조도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그런데 이 사업을 이렇게 400억 써서 이삼 년 뒤에 몇 명 못 했다고 하면 그냥 그럴 줄 알았어 하고 끝나면 되는 겁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위원님, 이 사업은 일단 취업 의욕 자체도 없어서 쉬었음으로 분류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예산을 써서 그런 기회를 주는 거고요.

○**소위원장 조정훈** 무슨 기회를 주는 겁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러니까 기업체에 가면 어떤……

○**소위원장 조정훈** 취업하면 좋다, 일하면 좋다 이런 걸 가르쳐 줄 기회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러니까 청년들이 어떤 그런 경험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취업할 생각을 못 하거나 역량이 안 되는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청년들한테 충분히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니까 그 기회가 구체적으로 무슨…… 인턴십입니까, 이게?

○**교육부차관 최은옥** 기업에서 어떤 직무역량이 필요한지, 취업을 하려면 어떤 직무역량을 기업은 요구를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실습도 학교에서 하고요. 대학들이 그런 경험을 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재학생이 아니고 비재학생이잖아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재학생들이…… 아니, 그러니까 청년들이.

○**소위원장 조정훈**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백승아 위원** 저도 한마디해도 될까요?

○**소위원장 조정훈** 백승아 위원님.

○**백승아 위원** 참 어려운 일이지요, 이 교육이라는 게. 제가 특히나 국회에 와서 많이 느끼는 게 참 다들 교육을 등한시하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교육이라는 게 투자한다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들 교육예산이 남아도니까 가져와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거고, 교육에 투자해 봤자 표가 되지도 않고 잘티가 안 나거든요. 백년지대계란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고요. 지금 투자해서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 청년들이, 왜 쉬었음 청년이 늘어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능력이 없어서 건강이 안 좋아서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회 구조적인 좌절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경험들을 쌓아 주면서 이 청년들에게 희망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고 뭔가 해 보자 하는 용기 욕구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도록 나라에서 교육부에서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청년 고용을 위한 더 적극적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벌인다고 취업률이 갑자기 막 치솟으면 정말 좋겠지요. 그런데 인간은 로봇이 아닙니다. 인간은 이만큼 돈 투자한다고 갑자기 그만큼 효과가 탁

나오는 그런 기계가 아니에요.

특히나 교육에 있어서는 이거 해서 뭐 할 거냐 돈 낭비 아니냐라는,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할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그런 논리가 필요하지만 이렇게 쉬었음 청년들을 위해서, 게다가 학교 다니지 않는 친구들을 학교에서 부트캠프 단기로 6개월 정도 교육시키는 것 정도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정말 모든 걸 다 버리는 그런 청년들이 될 수가 있고 그거는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교육에 대해서는 바로 이렇게 효율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좀 투자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단기 부트캠프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보다 더한 사업도 찾아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손 든 순서대로 강경숙 위원님, 김대식 위원님, 김준환 위원님.

○강경숙 위원 백승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저도 대학에 있으면서 이런 걸 많이 봤는데 이게 내용이 얼마나 실하게 운영되는지는 좀 체크를 해 봐야 되는 거라서, 보통 처음에 이런 사업단을 심사를 하지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취업을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다 아마 심사 점수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지속할지 안 할지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계 다 보는데 실은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뭐 하긴 하지만 그 사업단 하여튼 잘 봐야 돼요. 안 그러면 먹튀가 돼 버립니다. 이게 돈 따서 학생들, 쉬었음 청년 자체가 의욕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올지도 모르겠는데 제대로 모아야 되고, 지역사회에 어떤 조사를 해서 필요한 곳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어디어디 요소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되고, 실제로 취업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100% 책임이 있는 건 아니나 많이 취업을 시킬수록 여기 사업단의 점수가 좀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지속할 수 있는지도 좀 봐야 되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기업에서 운영하는 건 IT 쪽으로 내용들이 꽤 괜찮게 잘 운영되기도 하고 실적도 있는 것 같아 보여지기는 해요. 저도 백승아 위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그 부분에 공감이 돼서 이런 사업을 계속 해야 된다고 하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이것이 관리가 되지 않게 되면, 지역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수도권도 있고 지역들도 아주 되게 많아서 이런 것만 찾아다니면서 사업을 해서 돈 받아 챙기는 그런 먹튀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업단을 잘 보시지 않으면 제대로 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지역사회마다의 니즈도 있고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필요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찾아야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강사들도 엉망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수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강사진들도 거기서 모아서 사업단에서 꾸리기 때문에 그런 게 관리가 되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될 것 같아서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이어서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위원 존경하는 백승아 위원님하고 강경숙 위원님 말씀에 100%가 아니라 200% 동감합니다. 다만 지금 40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지요? 몇 개 사업단을 운영한다고 하셨지요, 차관님?

○교육부차관 최은옥 기존 88개 사업단 하고 있고요.

○김대식 위원 88개 사업단 지금 운영하고 계시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김대식 위원** 여기에 지금 수용하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중간점검 한번 해 보셨어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교당 평균 100명 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한 학교에 100명입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김대식 위원** 언제 기준으로 100명입니까?

○**교육부인공지능융합인재양성과장 이지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에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최소 양성 기준 인원이 학교당 100명 내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양성된 인원이 약 70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마다 초과 달성을……

○**김대식 위원** 그러면 교육부가 목표했던 것에, 충분한 인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까?

○**교육부인공지능융합인재양성과장 이지현** 예, 맞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성공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자체적인 평가 합니까?

○**교육부인공지능융합인재양성과장 이지현** 예, 저희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왜 그러냐면 이거를 80개가 아니라 100개 200개 저는 확장하면 확장할 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언론에서 모 대학, 전체가 그런 건 아닌데 일부 대학에서 이 기금을 따 가지고 축제장 행사에 써 버리고 또 무슨 유명한 가수 불러 가지고 그거 하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런 것은 절대 지양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이 중요한 거거든요. 추경이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지금 꼭 필요한 데 써야 되잖아요. 그런 점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가지고 그동안에 사업단 하는 대학별로 분석을 해서 예결위 소위 할 때까지 보내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이어서 김준환 위원님.

○**김준환 위원** 한말씀만 하겠습니다.

먼저 백 위원님께서 교육에 갖고 계시는 따뜻한 마음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문제가 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행정관료 출신인데, 교육 기간이 따져 보니까 3개월에서 6개월, 평균 5개월이라고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이 교육이요. 이분들 다 대학도 졸업하시고 그리고 졸업하시고 나서 바로 취업이 안 되면 훈련소라든지 어디든 계속 취업을 위한 노력을 했던 사람들로 보여져요. 그런데 3개월에서 6개월 다시 나라에서 운영하는 이 교육기관에 넣었다고 해 가지고 갑자기 이분들의 취업률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가 과연 합리적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 의문이 있고요.

차관께서 말씀하신 얘기 중에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40개 사업단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대체적으로 비사회적 청년, 소위 사회성이 떨어지는 청년들이 많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포기해서는 안 되지만 사실은 취업률은 더 떨어져요, 더 떨어지거든요.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계획의 순정성이랄까 계획의 필요성이랄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100% 동의하는데, 이것보다는 취업을 갈구

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위한 다른 사업을 더 연구해 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더 추가발언 없으면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또 추가 자료 교육부에서 주신 거 갖고 꼼꼼하게 할 텐데, 아까 김준환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이지요, 10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10번 사항은 보육교직원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어린이집의 차량 운영비 지원단가 인상을 위해서 39억 2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이 첫 번째 항목인데요. 이거는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급식위생관리지원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인건비 미지원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198억 5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이 상단에 있는 내용이고 마지막 부분은 장애인용 교구 구입비에 대한 추가 지원을 위해서 46억 3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3개의 내역사업에 대한 증액 의견 모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위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이견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할 만하면 이렇게 쉽게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상임위에서 부하가 걸린다는 건 준비가 조금, 그다음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솔직한 판단입니다. 현재 우리 교육위 정도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우리가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선미 위원 저도 말만 조금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진선미 위원님.

○진선미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증액 요청한 특히 청년들에 대한 사업에 관한 증액이 여러 가지로 검증이 사실 쉽지 않지요.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거였으면 애초에 청년실업률이 이렇게 높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라도 노력해서 그 사람들을 끌어내고 자극을 주고 그래서 늘 주책하는 자리 그런 것들에 대한, 그걸 뭐라고 하지요?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있는 거잖아요. 늘 청년들은 좋은 자리에 가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이나 또 지방이나 이런 데를 잘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계속 접점을 찾아서 기업들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게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에 대한 증액을 요청드린 거라서요. 하여튼 교육부에서 필요성과 그 근거들을 잘 좀 정리해서 예결위에서 설득을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발언을 남깁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일단 의결을 먼저 하고 부대의견을 검토하나요, 부대의견까지 하고?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부대의견부터 해 주시면……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이어서 부대의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시작되는 부대의견인데요. 이걸 하나씩 하나씩 검토할까요, 아니면?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간략히 제가 보고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부대의견은 총 11건의 항목이 있는데 이 중에서 6개 항목에 대해서는 부처에서 수용의견이고 일부수용이 1번 4번 7번, 3건 그리고 불수용의견이 2건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1번 항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히 우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추경이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재정안정화를 위한 기금 출연, 즉 시도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하는 것을 고려하고 이 기금의 적립 실적을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첫 번째 부대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처에서는 필수불가결한 경비 우선 집행하고 일부를 적립 고려하는 의견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부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위원장님, 1번의 부대의견은 2번하고 연결해서 같이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수정의견은 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3번은 수용이고요. 4번은 조금 문구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하고 그 문구를 거기에 저희가 써 왔습니다.

5번 수용이고요, 6번 수용. 7번은 현재 추경이 정부안이 짜여서 여기 국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문구를 조금 수정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8번도 같은 내용입니다. 9번 10번은 수용이고요. 11번은 저희가 재검토하기에는 이미 국회에 넘어왔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 불수용으로 의견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1·2번은 조금 이따가 마지막으로 보기로 하고요. 3번 수용은 이의 없으실 거고. 4번 김민전 위원님이 제출하신 부대의견에 대해서 문구 수정안이 지금 밑에 있는 겁니까, 교육부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소위원장 조정훈** 김민전 의원실에서 누구 계신가요? 없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문구 수정에 동의할 수 있는데 어떠신가요?

이의 없으시면 교육부 수정 문구를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5번 수용하셨고요, 6번 수용. 7번 교육부 수정의견이 있는데, 김대식 위원님 어떠십니까?

○**김대식 위원** 그러면 괄호 안에 이게 들어간다 이거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아니요. 그 괄호 안에 있는 거 빼고 ‘교육부는 이란상황으로 인한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대학부설연구소 AI 연구 인프라 및 전력 공급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까지가 수정의견입니다.

○**김대식 위원** '공급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실태를 점검하고', 실태를 점검 안하고 공급 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러니까 대학의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해서 해야지, 대학부설연구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김대식 위원** 많지요. 그러니까 인원이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맡겨도 믿을 만합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대학에서 전체적으로 좀 실태를 파악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내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에 하기에는.

○**김대식 위원** 예, 수용하겠습니다. 그런데 대학에만 너무 맡기면 좀 방만한 그게 돼 있으니까 이거를 불시에 랜덤으로 한두 개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보고가 허위보고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를 하라는 게 아니라 랜덤으로 갑작스럽게 한번 교육부에서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회의록에 그 내용 담기로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은 교육부 의견 수용해 주셨고요.

8번, 또 김대식 위원님 제안이신데 이번에는 교육부가 불수용입니다. 그런데 김대식 위원님이 굉장히 합리적인 제안을 하시는데……

○**김대식 위원** 이게 왜 불수용이지?

○**교육부차관 최은옥**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요.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신 대로 저희가 할 수밖에 없어서……

○**김대식 위원** 취약가정 학생에게 유튜브 지원 이거는 참……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사실상 추경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도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 사실은 이런 부분을 해야 되거든.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많아요.

○**진선미 위원** 그러니까 부대의견으로 하지 마시고 예결위에서 강력하게 어필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김대식 위원** 불수용한다며. 수용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예결위에서 내가 강력하게 해 놓을 테니까.

○**백승아 위원** 아니, 노력 조항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노력 조항으로.

○**교육부차관 최은옥** 저희가 검토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김대식 위원** 없어요? 알겠습니다. 내가 예결위에서 넣어 줄게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오늘 너무 양보하시는 거 아니세요,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위원** 교육부 잘하고 있으니까.

○**소위원장 조정훈** 자, 그러면 9번 10번 수용하셨고.

11번도 한번 보시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11번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 11번은 여러 가지 또 지적해 주신 사

항도 있고 하니까 맨 끝에 ‘편성 근거를 구체화한다’는 저희가 해 보겠고요. 그런데 ‘추가 경쟁예산안 재검토하고’는 저희 권한이 아니라서 그 부분은 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대식 위원** 오케이, 그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수정하시는 거로?

○**김대식 위원** 예, 수정하는 거로.

○**소위원장 조정훈** 그렇게 하고.

또 저도 하나 제안드리는 게 우리 방금 논의했던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관련 사업에 대해서 ‘교육부는 성과관리의 방안을 마련한다’로 부대의견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어때십니까?

교육부, 수용 가능하십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렇게 넣고요.

그다음에 1·2번으로 돌아와서, 이게 중요한 건데 차관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통합해서 그러면 교육부 수정 문구로 정리하면 어떨까요? 괜찮으시지요?

그러니까 1번에 수정의견 내신 거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소위원장 조정훈** 그걸로 1·2번을 통합하자는 제안입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런데 2번까지를 통합해서 저희가 수정의견을 낸 거는 아니고요.

○**소위원장 조정훈** 아, 그래요? 그러면 1번은 수정의견으로 대체하고 2번은 그대로 두고?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소위원장 조정훈**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를 마치고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이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논의하신 사항을 최종 정리하면 예산 증액 규모는 총 907억 6100만 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세한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5페이지에 있는 국립대학 시설 확충 부분에서 의대 여건 개선 사업이 소위 자료에서 1432억이었는데 164억 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말씀 주신 내용을 반영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7페이지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부분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수정 이유 부분을 말씀 주셔서 이 사업 대상이 정규 교육과정 대학생은 제외하는 것으로 문구를 정리해서 예결위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8페이지의 고졸자 후속관리 모델 관련해서도 직업계고뿐만 아니라 인문계고도 같이 포함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서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교육부 동의하시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중 교육부 소관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와 부대의견의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관계자, 수석전문위원, 보좌직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강경숙 김대식 김용태 김준환 백승아 조정훈 진선미

○**청가 위원(1인)**

문정복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 윤상열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교육부

차관 최은옥

기획조정실장 설세훈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부단장 지혜진